

취약계층의 식품소비행태 분석*

이계임** 이동소*** 이윤나****

Keywords

취약계층(vulnerable group), 식품소비(food consumption), 영양섭취(nutrition intake),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 식품지원제도(food assistance progra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food consumption and nutrition intake among those in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 including low income househol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small rural area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priority for food assistance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ir nutritional status meat, vegetables, milk and eggs must be provided for them. The government food aid programs should be aimed to ensure a sustainable food supply to the nation while striving to build connections to local agricultural industry and food producers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safe and fresh foods. The food support method should be chosen afte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 recipient and the accessibility to food suppliers.

차례

- | | |
|-----------------|--------------|
| 1. 서론 | 3. 영양섭취실태 분석 |
| 2. 식품소비지출 현황 분석 | 4. 결론 |

* 이 논문은 이계임 등(2012)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1. 서론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빈부격차의 심화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불건전한 식생활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가구의 규모가 시장소득 기준 시 2003년 9.3%에서 2010년에 12.2%로 증가하였다.¹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독신 가정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식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확대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00년 7.2%에서 2010년 10.9%로 10년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5.6%에서 24.7%로 크게 확대되었다.²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푸드뱅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수의 취약계층이 제도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박능후, 송미영 2008; 김태완 등 2010).³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이 다수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특히 노인·아동·한부모·조손 가구 등은 가구 특성상 식품접근과 이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⁴ 또한 지원형태도 생계비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특정 계층의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 지원형태에 국한되고 있어 지원 대상 계층의 경우에도 충분한 식생활 및 영양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식생활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김기량 등(2008, 2009), 김미연(2002), 오세영(2002), 박희정 등(2007), 임보경(2006), 김화영 등(2005), 김혜련 등(2011)이 있다. 김기량 등(2008)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별 영양섭취 현황을

1 빈곤가구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1년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를 참조하기 바람.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자료 인용.

3 취약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함.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됨.

4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분석하고 식품 불충분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김기량 등(2009)은 2008년 복지패널 자료의 식품보장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식품 미보장 수준을 조사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영양상태 또는 식생활 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미연(2002)과 오세영(200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조사 집단의 일반 사항, 건강상태, 식행동, 신체계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영양소 적정 섭취비, 평균 적정 섭취비를 측정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김미연(2002)은 수급 아동의 식이 섭취 수준은 낮은 편이긴 하나 비수급 아동의 경우와 유사한 반면, 수급가정 성인의 경우 저체중률이 높고 식이섭취도 매우 저조하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세영(2002)에서는 식품공급이 안정된 가구의 수급자는 불안정한 가구의 수급자에 비해 대부분 영양소의 섭취가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계측한 연구는 박희정 등(2007), 임보경(2006)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및 건강상태를 측정 후 일정 기간 식품 지원 후 효과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계층별 영양 및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로는 김화영 등(2005), 김혜련 등(2011)이 있다. 김화영 등(2005)은 서울 및 경인 지역과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섭취 수준, 건강상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기존 연구는 제도별로 수급가구에 국한하여 일부 수행되거나 식품미보장성만 평가하여 취약계층의 식품소비행태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식품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별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의 현황과 식품지출 및 영양섭취 파악을 위해 통계조사의 원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 현황 분석을 위해 2000~2011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계의 수입과 지출액을 가장형태로 조사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류 및 품목별 지출행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영양 및 식품 섭취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표본은 3,840가구로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2007~2010년 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2005~2009년 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간 표본수는 7,000여 가구이다.⁵

표 1. 분석 대상 통계원자료

통계	대상	표본수	조사항목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횡단면자료)	전 가구	10,721가구 (2011)	▪ 소득 ▪ 지출액	2000~201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횡단면자료)	전 가구, 1세 이상 가구원	3,840가구 (2010)	▪ 영양섭취 수준 ▪ 식품 불충분성	2007~2010
한국복지패널 (패널자료)	전 가구(제주도, 농어가포함)	7,072가구 (2009)	▪ 소득, 재산 ▪ 복지지원 현황 ▪ 식품 미보장성	2007~2009

2. 식품소비지출 현황 분석

2.1. 식료품비 지출 추이

소득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최저생계비의 100~120%, 최저생계비의 120~150%,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수준

5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가계동향조사 (2011)		복지패널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0)		
	가구	%	가구	%	명	%	
소득	최저생계비 100% 이하계층	2,080	19.4	5,150	27.8	6,516	22.7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426	4.0	1,089	5.9	1,279	4.5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674	6.3	1,517	8.2	1,754	6.1
	최저생계비 150% 초과	7,541	70.3	10,799	58.2	19,170	66.8
가구 규모	1인	1,676	15.6	4,360	23.5	1,613	5.4
	2인	2,861	26.7	5,541	29.9	5,670	18.8
	3인	2,583	24.1	3,397	18.3	6,112	20.3
	4인	2,780	25.9	3,793	20.4	10,446	34.7
	5인 이상	821	7.7	1,464	7.9	6,291	20.9
지역	농촌	2,198	20.5	4,705	25.4	7,170	23.8
	도시	8,523	79.5	13,850	74.6	22,962	76.2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은 다시 사회수혜금 혜택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로 구분하였다.^{6,7}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참조하였으며, 해당 소득 구간의 평균 식료품비는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⁸

2000~2011년 식료품비의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식료품비의 연평균 증감률은 -0.2%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소득수준별로 다른 추세를 나타내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식료품비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7%의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계층의 가구는 연평균 0.3%의 증가 추세를 보여 계층 간 식료품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식료품비를 100이라고 할 때 소득구간별 평균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취약계층의 식료품비는 전체 평균의 60.3%에 달한 반면, 2011년에는 51.2%로 감소하였다. 최저생계비 100~120% 계층은 같은 기간 72.0%에서 69.2%로 감소하였다.

표 2. 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원/월, %

연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100~120%	최저생계비 120~150%	최저생계비 150% 초과
		소계	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2000*	499,562.9	60.3	59.3	61.9	72.0	77.2	108.5
2005*	526,949.8	57.5	54.9	67.9	68.4	73.9	109.7
2007	480,691.9	50.9	49.2	58.8	64.2	76.9	113.9
2008	486,445.0	52.5	50.3	62.9	63.9	75.4	111.3
2011	488,521.9	51.2	53.2	50.1	69.2	77.7	115.0
2000~2011 (연평균 증감률)	-0.2	-1.7	-1.2	-2.1	-0.6	-0.1	0.3

주: 1) 2000, 2005년 자료는 1인 가구 제외, 2006년 이후는 1인 가구 포함 전 가구 평균값임.
 2) GDP 디플레이터(2005=100)를 이용해 2005년 가격으로 환산한 식료품비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 6 시장소득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 7 소득구분은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계층 분류 기준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함.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경우도 부양 및 재산조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상당수에 달하므로 사회수혜 여부로 다시 구분함.
- 8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11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2,504,578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 시마다 266,291원 증가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앙겔계수는 전체 가구의 경우 2000년 23.3%에서 2011년에 20.4%로 하락하였다<표 3>.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과 최저생계비 100~120% 계층도 앙겔계수가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앙겔계수는 24~25%로 최저생계비 150% 초과 가구의 19.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 3. 앙겔계수 비교

단위: %

연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100~120%	최저생계비 120~150%	최저생계비 150% 초과
		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2000	23.3	27.7	27.5	29.4	27.4	22.6
2005	22.3	27.0	24.4	26.1	25.8	21.8
2007	21.1	25.8	22.8	25.0	25.2	20.5
2008	21.4	26.7	23.9	25.5	24.9	20.7
2009	20.4	24.3	24.7	25.0	24.0	20.0
2011	20.4	24.2	25.1	24.3	23.7	19.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2. 가구특성별 식료품비 비교

가구의 사회·인구 특성별로 식료품비 지출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1인당 식료품비 수준을 살펴보면, 연령계층별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식료품비가 월평균 18만 9,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21만 4,000원에 비해 88.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낮으며, 가구유형별로는 노인가구와 결손가구가 전체 가구 식료품비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구특성별 1인당 식료품비 지출수준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식료품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의 1인당 식료품비는 전체 평균의 75~76% 수준인 반면,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 계층은 108% 수준으로 나타나 계층 간 1인당 식료품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가구특성별 1인당 식료품비 지출수준 비교, 2011¹⁾

단위: 천 원/월, %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초과	F-value	
전체	214.1(100)	75.7	76.0	76.3	108.9	339.96***	
가구주 연령	30대 미만	259.0(100)	64.4	51.4	59.0	108.0	17.16***
	30대	207.1(100)	72.4	60.2	65.7	105.2	53.92***
	40대	209.3(100)	64.5	65.7	68.8	105.3	100.68***
	50~65세 미만	233.9(100)	77.4	73.5	76.4	106.6	54.06***
	65세 이상	189.3(100)	84.8	98.5	100.2	132.7	153.31***
가구원 수	1명	267.1(100)	68.7	77.2	82.3	126.4	161.98***
	2명	233.3(100)	69.4	77.2	80.7	117.7	246.28***
	3명	211.0(100)	60.0	68.4	68.5	107.0	132.72***
	4명	180.7(100)	64.3	70.4	74.3	104.2	132.80***
	5명 이상	150.8(100)	68.8	71.0	80.8	107.5	59.99***
거주 지역	농촌	195.6(100)	73.3	78.3	75.5	112.3	94.86***
	도시	217.3(100)	76.6	75.7	76.6	108.2	236.13***
가구 유형	독거노인	197.4(100)	86.6	105.5	108.9	104.3	32.07***
	일반노인	173.1(100)	89.4	99.7	114.0	170.1	32.39***
	결혼가구	179.6(100)	69.4	82.3	82.0	139.1	33.28***
	일반가구	219.3(100)	74.3	70.2	71.0	106.1	226.53***

주: 1) 사회·인구특성별에 포함되는 가구의 전체 1인당 평균 식료품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소득구간별로 사회·인구특성별에 해당되는 가구의 평균 1인당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는 유의수준이 1% 이하, **는 5% 이하, *는 10% 이하인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3. 식품지출 영향요인 비교

식품류 및 품목별로 식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하고자 2011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엔겔식형태의 지출함수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⁹ 함수식 형태는 선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식품류별 및 주요 품

⁹ 식품소비지출분석을 위해 지출액을 이용한 엔겔 지출함수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최지현, 이계임(1995); 이계임, 김성용(2003); 박재홍, 이한성, 유소이(2007) 등이 있음. 최지현, 이계임(1995)은 엔겔함수형태의 지출함수를 설정하여 경제·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계임, 김성용(2003)은 수산물 품목별로 엔겔식 형태의 지출함수를 설정한 후 SUR 모형을 이용하여 지출수요의 결정 요인을 추정하였음. 박재홍, 이한성, 유소이(2007)는 엔겔 지출함수를 설정하여 도시간계의 쌀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였음.

목별 지출액을,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제·인구·사회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1) \quad w_i = \alpha_i + \beta_i y + \sum_{k=1}^n \delta_{ik} D_k$$

$w_i = i$ 품목에 대한 가구당 지출액, $y =$ 가구의 가처분 소득,

$D_k =$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k = 1, \dots, n$)

식품류 및 품목별로 식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하고자 2011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함수식 형태는 선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식품류별 및 주요 품목별 지출액을,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제·인구·사회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경제·인구·사회적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거주지역, 가구형태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으므로 가구주의 학력을 전문대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식품소비와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가구규모와 가구형태로 가구규모변수는 가구원 수를 이용하였으며, 가구형태는 노인가구 여부, 결손가구 여부를 더미로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지역별로 식품의 가격, 이용가능성 등이 상이하므로 이들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표 5. 식품류 및 품목별 소비함수 추정 시 투입변수

구분	변수명	단위
종속변수	식료품비	원
독립변수	경상소득	원
	가구원 수	명
	가구주 연령	세
	가구주 성별	남=1, 여=0
	가구주 학력	전문대졸 이상=1, 미만=0
	거주지역	도시=1, 농촌=0
	노인가구	독거 또는 일반 노인=1, 기타=0
	결손가구	편부 또는 편모 또는 조손가구=1, 기타=0

식료품비에 대한 가계지출함수를 통상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구 전체에 대한 모형에서는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등이 식료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 소득과 식료품비간의 정(positive) 관계를 보이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앞서 분석한 가구특성별 1인당 식료품비 지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지역 기준 시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이 많았으며,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와 결손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이 도시가구에 비해 10%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자가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하여 식료품 지출함수를 추정하여 비교한 결과,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노인가구 여부 등이 식료품비 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소득수준별 식료품 지출함수 추정 결과, 2011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100~120%	최저생계비 120% 초과
상수항	66782***	85816***	-412.764	47544***
경상소득	0.06149***	0.09056***	0.0623***	0.05416***
가구원 수	62579***	45444***	53056***	67099***
가구주 연령	51450***	35750***	24367	53111***
가구주 성별	936.6437***	11.01835	1926.087**	1884.138***
가구주 학력	2322.186	44952***	18041	1173.124
거주지역	38282***	33362***	55676***	36381***
노인가구 여부	-79143***	-32725***	-65404**	-69664***
결손가구 여부	-18629*	-11973	-13595	-11886
수정된 R ² 값	0.5153	0.3964	0.2801	0.4045

주: 1) 식료품비는 외식비를 포함.
 2) ***는 유의수준이 1% 이하, **는 5% 이하, *는 10% 이하인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생계비 지원형태의 식품 지원은 해당 취약계층의 공적이전소득 변동을 통해 경상소득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생계비 지원의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파급 영향력은 소득변수의 모수 추정치로 산출되는 한계지출성향을 통해 파악될 수 있으며, 추정된 지출함수에서 모수 추정치는 한계지출성향을 의미한다. 한계지출성향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경우 0.0906이었으며,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계층은 0.062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생계비 1,000원을 지급할 경우 식품지출로는 100원 미만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 등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수준이 향상되더라도 식품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7>.

표 7. 식품류별 한계지출성향 추정 결과 비교, 2011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100~120%	최저생계비 120% 초과
식료품비	0.0615***	0.0906***	0.0623***	0.0542***
가정식비	0.0213***	0.0589***	0.0335**	0.0188***
곡물	0.0023***	0.0069***	0.0003	0.0021***
육류	0.0063***	0.0139***	0.0091**	0.0055***
수산물	0.0033***	0.0118***	0.0128***	0.0028***
과일 및 채소	0.0058***	0.0169***	0.0066***	0.0051***
기타	0.0037***	0.0095***	0.0048	0.0032***
외식비	0.0402***	0.0317***	0.0288***	0.0354***

주: ***는 유의수준이 1% 이하, **는 5% 이하, *는 10% 이하인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4. 식품 미보장 수준

식품 접근성 제약에 따른 식품의 미보장(insecurity)은 취약계층의 영양부족과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식, 가격이 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 구입, 스트레스로 인한 식행동 변화 등으로 비만 위험률 증가, 노인 우울증, 어린이 학업 성취도, 저소득계층 만성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⁰. 식품

10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의 농무부(USDA)에서는 ‘food security’를 ‘모든 국민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사회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함(김기량 등 2008 참조).

의 보장성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을 의미하며, 가구의 경험과 인식을 근거로 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대응 노력을 조사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가구의 접근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 보장에 대한 측정 도구 중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미국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로 1995년부터 ‘식품보장 조사(Food Security Supplement)’, ‘국민건강영양조사’, ‘복지개혁 영향평가 프로그램 패널조사’ 등 국가차원 조사에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패널조사에서 2008년부터 미국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의 간략형을 기초로 가구의 식품 보장성을 평가하는 6개 문항이 조사되고 있다.¹¹ 2007~2009년 복지패널 원자료를 통합하여 가구 차원에서 식품의 보장성에 관한 6개 문항을 기준으로 식품의 보장 여부를 분류하여 식품 미보장 현황을 분석하였다<표 8>.¹²

2007~2009년 복지패널 원자료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식품 미보장률은 3.6%로 분석되었다. 식품 미보장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현재 수급가구인 경우 21.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경우 해당계층의 5분의 1 정도는 식품 미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 이외 특성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미보장률이 높고,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7.5%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가구특성별로는 결손가구가 12.7%, 독거노인가구가 10.6%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 미보장률 차이가 가장 크고, 연령 및 1인 가구 여부 등의 특성도 식품 미보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 미보장 상태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누적분포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복지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균등화 소득을 산출하고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식품 미보장 가구의 소득수준별 누적그래프를 도출한 것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00% 정도인 경우 식품 미보장 가구의 60%가

11 식품의 미보장성 조사항목(복지패널)은 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 ②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여부, ③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여부, ④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개월 수, ⑤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우, ⑥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여부로 구성됨.

12 응답점수는 자주, 가끔, 거의, 몇 개월, 몇 개월 동안, 그렇다는 1점으로 환산하고, 없음, 1~2개월 동안, 아니다는 0점으로 환산하여 6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함. 0~1점은 식품 보장, 2~4점은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는 식품 미보장, 5~6점은 배고픔을 동반하는 식품 미보장으로 분류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시 최저생계비의 100%를 기준으로 하면 식품 미보장 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가구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식품 미보장 가구 중에는 경제적인 특성이 식품 미보장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가구가 일정 수준 존재하므로 식품 미보장 상태에 있는 모든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책지원 소득기준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미보장 가구의 70~80%(75%)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40~180%(150%)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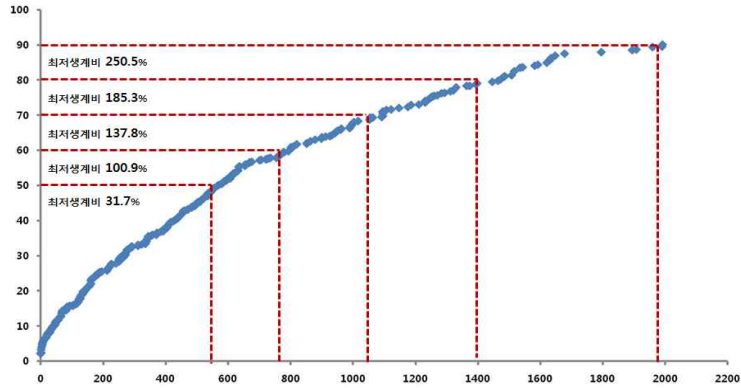
표 8. 가구구성별 미보장률 비교, 2007~2009

		가구 수	식품 미보장률
소득 구분	전체	18,555	3.6
	현재 수급자	1,531	21.1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3,619	7.7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1,089	6.3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1,517	6.2
	최저생계비 150% 초과	10,799	1.3
가구주 연령	30대 미만	657	1.4
	30대	2,968	2.1
	40대	3,544	3.1
	50~65세 미만	2,894	3.4
	65세이상	8,492	6.2
가구 규모	1인	4,360	7.5
	2인	5,541	3.3
	3인	3,397	2.5
	4인	3,793	1.8
	5인 이상	1,464	4.3
지역	대도시	7,856	4.2
	시	5,994	3.0
	군	4,070	3.4
	도농복합군	635	3.1
가구 특성	독거노인가구	2,835	10.6
	일반노인가구	2,218	3.6
	결손가구	500	12.7
	일반가구	13,002	2.7

자료: 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결과.

¹³ OECD 기준 균등화 소득 = $\frac{y_i}{\sqrt{\text{가구원수}}}$, y_i 는 개별 가구의 시장소득

그림 1. 식품 미보장 가구의 소득수준별 누적 그래프



자료: 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결과.

3. 영양섭취실태 분석

3.1.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및 건강인식 현황

대부분 영양소에서 소득수준 간 유의적인 섭취량의 차이를 보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권장량 대비 섭취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추정량의 83%에 불과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에서도 대체로 9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수급자의 경우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60%에 못 미치며, 리보플라빈과 비타민C의 섭취 수준도 권장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하 비수급자 그룹은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생계비 100~150% 계층에서도 칼슘 섭취가 권장량의 64%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과 마찬가지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급원별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탄수화물 급원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지방과 단백질 급원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에서는 탄수화물 급원 에너지 비중이 70% 정도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반면, 지방과 단백질 급원 에너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영양소별 권장섭취량(RI) 대비 섭취 비율 및 에너지 대비 영양소 비율

단위: %

구분	현재 수급자 (n=1221)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n=5295)		최저생계비 100%~120% (n=1279)		최저생계비 120%~150% (n=1754)		최저생계비 150% 초과 (n=19170)		F-valu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에너지(EER 대비 %)	83.1*** ³⁾	1.4	88.7*** ³⁾	0.8	90.8*** ³⁾	1.4	90.7*** ³⁾	1.1	95.3	0.4	29.85***
칼슘(RI 대비 %)	53.7***	1.7	59.2***	1.1	64.3***	1.5	63.8***	1.3	72.3	0.5	58.93***
인(RI 대비 %)	128.9***	2.3	144.7***	1.5	153.2***	2.8	152.0***	2.4	165.6	0.8	87.01***
철(RI 대비 %)	101.7***	2.9	124.9**	2.4	122.2	6.0	114.3***	2.5	131.6	1.1	27.65***
나트륨(AI 대비 %)	293.8***	7.6	327.0**	4.3	318.0**	7.3	320.6**	7.3	340.6	2.3	11.62***
비타민 A(RI 대비 %)	86.4***	3.8	106.2***	4.1	114.8*	5.5	104.9***	3.1	126.7	1.7	31.79***
티아민(RI 대비 %)	101.8***	2.8	101.8***	1.4	118.0*	3.1	117.8**	2.4	124.4	0.8	56.08***
리보플라빈(RI 대비 %)	76.2***	2.1	77.5***	1.2	92.8**	2.1	90.9***	1.8	99.5	0.6	85.11***
나이아신(RI 대비 %)	90.2***	2.0	94.0***	1.1	106.6***	2.3	104.3***	1.8	116.0	0.7	97.58***
비타민 C(RI 대비 %)	83.1***	4.5	90.2***	2.0	108.5	5.4	102.2***	3.2	115.4	1.3	41.58***
지방급원 에너지 비(%)	16.6***	0.4	15.7***	0.2	18.4	0.4	18.5**	0.3	19.5	0.1	69.67***
단백질급원 에너지 비(%)	13.5***	0.2	13.7***	0.1	14.4	0.2	14.4***	0.1	14.9	0.0	53.45***
탄수화물급원 에너지 비(%)	69.8***	0.5	70.6***	0.3	67.2***	0.5	67.1***	0.4	65.6***	0.1	85.27***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27.5		17.8		14.5		16.8		11.1		243.31*** ⁴⁾

주: 1)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은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을 말함.
 2) ***는 유의수준이 0.1% 이하, **는 1% 이하, *는 5% 이하인 값임.
 3)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과의 유의차.
 4) χ^2 -value

자료: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통합분석 결과; survey procedure로 분석한 결과임.
 권장섭취량(RI) 출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낮으며,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EQ-VAS)와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평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소득수준별 건강 관련 인식 수준 비교

단위: %

구분	현재 수급자 (n=665)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n=3488)		최저생계비 100%~120% (n=630)		최저생계비 120%~150% (n=785)		최저생계비 150% 초과 (n=8652)		F-valu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EQ-VAS ²⁾	66.4*** ⁵⁾	0.9	69.6*** ⁵⁾	0.5	73.4*** ⁵⁾	0.7	74.0*** ⁵⁾	0.7	76.4	0.2	87.99***
EQ-5D 지수 ³⁾	0.8***	0.0	0.9***	0.0	0.9***	0.0	0.9***	0.0	1.0	0.0	150.75***
주관적 건강인지율(%) ¹⁾	35.0		36.2		43.5		45.2		49.3		161.50*** ⁶⁾

주: 1)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을 말함.

2) EQ-VAS: 시각적 척도로 나타낸 주관적인 오늘의 건강상태.

3) EQ-5D: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다섯 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

4) ***는 유의수준이 0.1% 이하, **는 1% 이하, *는 5% 이하인 값임.

5)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과의 유의차.

6) χ^2 -value

자료: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통합분석 결과; survey procedure로 분석한 결과임.

3.2. 취약계층의 사회·인구특성별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비교

취약계층의 사회·인구특성별로 특히 부족한 영양소를 검토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연령·가구원 수·거주지역·가구유형을 세분하여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수준을 분석하였다<표 11>.

연령별로 에너지 섭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다른 영양소의 경우 연령별 섭취 수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칼슘과 리보플라빈의 섭취 수준이 권장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비타민C도 58~75% 수준을 나타냈다. 청소년층(12~18세)의 영양소 섭취 수준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리보플라빈도 80% 수준에 불과하였다.

연령군별, 영양소별로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인 그룹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30세 이상 성인 및 노인군에서는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하 비수급자 그룹의 에너지, 칼슘, 리보플라빈, 비타민C 섭취량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수급자 그룹에서만 4개 영양소의 섭취가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경우 대체로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 거주자의 섭취량이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며, 동지역 및 읍·면지역 모두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하 비수급자 그룹의 영양소 섭취량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영양섭취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가구는 비독거가구에 비해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경우는 영양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에너지 섭취율도 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슘, 리보플라빈, 비타민C 섭취율도 크게 낮았다.

표 11. 취약계층의 가구특성별 권장섭취량(RI) 대비 섭취 비율

단위: %

구분	현재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에너지 ⁶⁾	칼슘 ⁶⁾	리보플라빈 ⁶⁾	비타민C ⁶⁾	에너지 ⁶⁾	칼슘 ⁶⁾	리보플라빈 ⁶⁾	비타민C ⁶⁾	
연령별	1~2세	98.84	73.80	133.06	70.96***	97.65	84.69	140.39	128.17
	3~5세	90.70	60.90*	127.00	105.07***	85.04	59.97***	116.03***	178.05
	6~11세	93.31*	63.98	122.82	115.92	96.40	55.63***	115.76***	103.69***
	12~18세	82.79*	43.73***	82.36*	70.58***	91.56	50.47	86.97	100.29
	19~29세	82.63	61.37	90.71	83.22	85.00	67.03	94.69	87.70**
	30~49세	84.77***	60.26***	73.73***	101.86	89.96***	69.74***	90.44*	100.56***
	50~64세	81.19***	63.36*	67.41***	87.54***	89.89***	60.51***	71.89***	94.09***
	65세 이상	78.05***	43.04***	49.08***	58.13***	87.41**	50.88***	56.17***	74.53***
지역	동	83.35***	54.70***	78.85***	85.67***	88.51***	60.68***	81.85***	92.88***
	읍·면	82.39***	50.40***	67.12***	74.30***	89.31***	55.86***	67.35***	83.91***
가구유형	한부모가구 ²⁾	90.41	48.51	95.70	77.03	88.41	59.13	93.49	75.65
	조손가구 ²⁾	91.77	72.45*	104.81	94.99	83.77	56.87*	103.32**	84.80*
	기타가정 ²⁾	82.82***	47.40***	94.11***	85.65***	95.02	55.42***	105.64***	123.32
	노인(독신) ³⁾	76.65***	39.79***	48.76***	59.41***	82.55**	43.65***	52.67***	64.34***
	노인(부부) ³⁾	81.78*	53.34**	50.67***	58.28***	88.08**	59.16***	56.33***	79.76***
	노인(포함) ³⁾	75.29***	45.37***	47.75***	63.60***	91.45**	57.52***	59.45***	86.43
	독거가구 ⁴⁾	76.35***	49.86***	54.63***	72.74***	83.12***	51.03***	68.02***	70.59***
	비독거가구 ⁴⁾	82.96***	56.61***	69.97***	85.11***	88.90***	61.14***	74.29***	89.29***

주: 1) 에너지는 필요추정량 대비임.

2) 18세 이하만 포함.

3) 65세 이상만 포함.

4) 19세 이하만 포함.

5) ***는 유의수준이 0.1% 이하, **는 1% 이하, *는 5% 이하인 값임.

6)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과의 유의차.

자료: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통합분석 결과; survey procedure로 분석한 결과임.

권장섭취량(RI) 출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0).

3.3. 취약계층의 식품군별 섭취 수준

소득계층별 식품군별 섭취량을 보면,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성 식품의 경우 현재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이하 그룹의 섭취량은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 수급자의 경우도 모든 식품군의 섭취량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류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대부분의 식품류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식물성 식품 중에서 과일류와 채소류의 섭취량 차이가 컸다. 동물성 식품류는 육류, 난류, 어패류, 우유류 모두 소득수준 간 섭취량의 차이를 보였다.

식물성 식품군에서는 취약계층의 곡류 및 그 제품의 섭취가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의 90% 이상 수준으로 되고 있는 반면, 버섯류는 48~84%, 과일류는 68~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성 식품군에서는 취약계층의 어패류 섭취가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의 65~8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소득계층별 식품군 섭취 수준

단위: g, %

구분	현재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곡류 및 그 제품	278.4(92.6)	302.9(100.8)	290.0(96.5)	297.9(99.1)	300.5
채소류	242.3(80.1)	285.3(94.4)	287.6(95.1)	272.8(90.2)	302.2
버섯류	2.4(47.8)	2.8(56.7)	3.0(61.0)	4.2(84.3)	4.9
과실류	130.7(68.7)	129.3(68.0)	144.7(76.1)	157.8(83.0)	190.1
음료 및 주류	148.6(67.3)	148.2(67.1)	167.9(76.1)	175.2(79.4)	220.9
식물성 식품계	909.5(78.5)	989.2(85.4)	1023.2(88.4)	1033.1(89.2)	1158.3
육류 및 그 제품	67.9(70.6)	73.1(76.0)	81.4(84.7)	91.1(94.8)	96.2
난류	19.4(73.3)	18.4(69.5)	27.3(103.4)	21.4(80.9)	26.5
어패류	37.5(64.9)	42.8(74.0)	48.9(84.6)	45.0(77.9)	57.8
우유류 및 그 제품	89.6(80.2)	71.0(63.5)	97.5(87.3)	101.3(90.7)	111.8
동물성 식품계	214.7(73.4)	205.4(70.3)	255.3(87.3)	259.1(88.6)	292.2
총계	1124.1(77.5)	1194.6(82.4)	1278.4(88.1)	1292.1(89.1)	1449.8
식물성 섭취 비율%	81.5	83.5	79.5	79.7	80.9
동물성 섭취 비율%	18.5	16.5	20.5	20.3	19.1

주: ()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인 계층 섭취량을 100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통합분석 결과.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부족 영양소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특성별로 세분하여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독거가구의 동물성 섭취량 및 채소류, 과일류 등의 섭취량이 낮았으며, 독거가구 중 현재 수급자 그룹의 동물성 식품군 및 과일류의 섭취량은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에 비해 절반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류의 경우 독거가구 수급자의 섭취량은 독거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 섭취량의 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13. 고소득층과 비교한 저소득층의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섭취 비율

단위: %

구분	현재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과일	채소	곡류	육류	난류	어패류	우유	과일	채소	곡류	육류	난류	어패류	우유		
연령별	1~2세	39*** ⁶⁾	57*	108	66	125	246	91	66 ⁶⁾	77	99	103	67	96	107	
	3~5세	73	81	104	95	93	93	83	97	76**	97	58***	85	97	84	
	6~11세	79	94	90*	91	98	61***	106	53***	84**	98	75***	109	87	80**	
	12~18세	97	85*	84***	86	95	73	75***	93	105	106	94	106	109	89	
	19~29세	67*	91	99	81	83	89	90	76*	96	105	88	112	98	88	
	30~49세	84	87**	94	65***	78	64***	57***	71***	93**	101	77***	82*	82**	82	
	50~64세	61***	79**	87**	74	50***	89	94	66***	92**	99	92	72***	66***	61***	
	65세 이상	48***	75***	92**	51***	35***	68	82	67***	91**	100	101	73**	73***	73*	
지역	동	71***	81***	93**	76***	73***	67***	81**	70***	93***	100	79***	79***	76***	72***	
	읍·면	62***	76***	89*	52***	76	57***	82	64***	94	100	69***	49***	72***	44***	
가구 유형	한부모가구 ²⁾	121	84	89	106	89	72	95	63	84	108	71	91	112	124	
	조손가구 ²⁾	81	129	118	121	81	226	118	69	92	94	87	89	252*	96	
	기타 가정 ²⁾	94	96	95	85	109	83	71**	86	102	106	93	106	102	80**	
	노인(독신) ³⁾	41*	61*	90	24***	34	71	37**	41**	64*	95	59	52	48*	55*	
	노인(부부) ³⁾	32***	66**	96	70	54	38***	103	55***	89	99	95	84	67**	30**	
	노인(포함) ³⁾	38***	74**	82**	52*	21***	53**	89	73*	86**	98	88	75	76	80	
	독거가구 ⁴⁾	47**	68***	89*	23***	25***	56*	60	53***	70***	94	55***	53***	51***	62*	
	비독거가구 ⁴⁾	69***	83***	93*	66***	65***	67***	65***	68***	91***	101	76***	67***	70***	65***	

주: 1)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의 식품 섭취량을 기준(100%)으로 하여, 각 그룹의 섭취 비율을 계산함.
 2) 18세 이하만 포함.
 3) 65세 이상만 포함.
 4) 19세 이하만 포함.
 5) ***는 유의수준이 0.1% 이하, **는 1% 이하, *는 5% 이하인 값임.
 6)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과의 유의차.

자료: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통합분석 결과; survey procedure로 분석한 결과임.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전반적으로 육류, 난류, 어패류, 우유류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그룹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동물성 식품 섭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유형별로는 조손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과일류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경우 조손가구의 평균 과일 섭취량이 78.4g, 한부모가구가 평균 119.3g으로 기타 가구 150g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각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그룹과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이하나 비수급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 독거가구의 수급자나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 노인의 식품 섭취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면서 수급자인 그룹의 채소류, 과일류의 섭취량과 육류, 그리고 유류의 섭취량이 높은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사회적 취약계층이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이 겪는 식생활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간 2조 3,619억 원(2012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다수의 식품 관련 지원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대상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다수의 취약계층이 제도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원 대상 계층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식품소비와 영양섭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취약계층의 식료품 소비는 전체 가구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식품의 구매 및 조리상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많아 식품비 지원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 계층 중에서 노인과 어린이·청소년은 특히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높아 건강상 문제가 되거나 저성장·저체중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영양불균형은 국민 전체의 미래 소득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미래 인력의 건강 확보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품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식품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식품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식품

지원방식이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직접 연계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지원해야 하며, 수요자가 지원 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식품지원제도의 시행 대상은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성과 영양부족실태를 근거로 하여 소득, 재산, 연령, 가구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지출, 식품 미보장성, 영양부족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며, 연령·지역·가구유형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식품의 미보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소득변수가 매우 유의적이며, 가구유형 및 거주지역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경우 식품의 미보장성과 영양부족실태가 크게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의 경우도 가구의 상당수가 식품의 미보장성 상태에 있으며 영양부족현상이 기준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나, 기준선은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취약계층의 식품소비행태 분석 결과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식품 미보장성과 영양섭취 부족 현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가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연령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령층과 청소년층, 가구유형별로는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적 특성을 종합할 때 식품 및 영양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계층은 읍·면지역 독거노인가구였다.

지원 대상 식품류는 해당 계층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현황을 기초로 대상 식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소득수준별로 저소득계층에서는 에너지 섭취량도 부족하며, 특히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C의 섭취가 권장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식품군별로는 채소류, 버섯류, 과일류, 육류, 우유류, 계란류 섭취가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계층의 경우 곡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섭취가 부족했으며, 특히 과일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신가구의 경우 과일과 육류·우유류·계란류의 섭취가 비독신가구에 비해 크게 부족하므로 독거노인 대상으로 이들 식품의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식품 지원은 부족한 영양소의 양적인 보충에 그치지 말고 우수하고 신선한 식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식품은 소분류 군별로만 제시하여, 지역 내 제철 농산물 등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품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식품 지급형태는 타 용도 사용 가능성이 높은 현금 지급은 우선 지급형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급유형에 대해서 해당 취약계층의 연령 및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리능력, 식품 또는 음식의 공급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여건상 거동이 불편하고 조리능력이 없는 경우는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이 적합하며, 신체적인 불편이 없고 조리능력이 있으며 식품공급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경우는 식품 구매권 형태의 지급이 적합하다. 아동은 낙인감에 민감한 계층이므로 낙인감이 적은 배달이나 급식이 적절한 지원유형이 될 수 있다. 학교, 아동급식지원센터 등의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영양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신체적인 여건과 공급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혜 대상자가 식품 지원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8.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예방의학회지」 41(6): 387-396.
- 김기량, 신영전, 김미경. 2009. “한국 식품 미보장 현황 및 특성.” 「보건사회연구」 29(2): 268-292.
- 김문길, 김태완, 박신영, 이병희, 임병인, 이성현. 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연구보고서 201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연.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에 따른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영양상태와 식생활 실태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초일 외. 201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영양관리대책 개발」. 건강증진연구사업 일반 09-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태완 외. 2010.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1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화영, 김명환, 홍성길, 황성주, 박미현. 2005. “일부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영양소 섭취, 영양위험도 및 생화학 지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2): 216-223.
- 김혜련, 이수형, 최중명, 오영인. 2011. 「저소득층 아동 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1-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 송미영.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학회지」 39: 287-314.
- 박재홍, 이한성, 유소이. 2007. “도시가계의 쌀 소비지출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제41권 제1호. pp. 35-43.
- 박희정, 임보경, 김화영. 2007.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식품지원 프로그램 효과.”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22(1): 149-156.

오세영.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효과적인 식생활 관리를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이계임, 김성용. 2003.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4권 제4호.

이계임, 황윤재, 이동소, 김가영, 이윤나, 김기량.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연구보고서 R6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보경. 2006.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식품지원 프로그램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지현, 이계임. 1995. 「주요 식품의 소비구조 변화와 전망」. 연구보고서 R3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고 접수일: 2013년 11월 20일

원고 심사일: 2013년 11월 22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2월 20일